



'장부' 없이 가게 운영하는 사업자 소득세 부담 늘어난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자(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경비율(소득상한배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순 공포·시행된다.

소득상한배율이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과, 업종별로 정해진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해 산출한 수치를 비교, 적은 수치를 택해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주요경비(매입비, 인건비, 임차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기타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만들어진 제도. 하지만 장부·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우대 혜택을 취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소득상한배율이 현행보다 0.2%포인트 오른다.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2.4%의 배율을 적용받는다.

기재부는 "장부·증빙에 의한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예컨대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으로 보는 금액이 26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

'소부장'·'반도체' 제조시설 투자하면 법인세 감면 팍팍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범위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이 추가된다. 또 내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위탁하는 연구비용(신성장 R&D)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등 102개 제조 시설에 투자(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하면 투자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 공제대상 시설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등 39개

시설이 추가된다.

또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안전시설에 송유관, 액화석유가스(LPG) 등 대형사고 위험 시설의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시설·첨단물류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스마트 조명, IE4 전동기 등이 추가된다.

안전시설 투자 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 5%, 중소 10%.

생산성향상시설은 2·5·10%, 에너지절약시설은 1·3·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대·중견 20~30%, 중소 30~40%) 대상인 위탁기관 범위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또는 간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된다.

현재는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되, 임상 1·2·3상 시험만 예외적으로 해외기관 위탁연구비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국외위탁 범위를 확대한 데는 R&D 성과물이 유출될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간주임대료 이자율' 인하... 임대사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인하되면서 임대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 2.1%에서 1.8%로 0.3%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 인하(시중은행 평균 금리 2018년 2.02%→지난해 1.85%) 추세를 반영한 조치.

부동산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보증금에 따른 이자를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대보증금에 국제청장이 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이자율은 오는 4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분부터 적용된다.